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일시 |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9:30 - 12: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실

주관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Program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 세부일정

시간	내용	
09:30~0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환영사 :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축 사 	
09:40~09:4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Session 1] 발 제		
09:45~10:15	발제 1	• 하정우 센터장(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
10:15~10:45	발제 2	• 김용희 교수(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10:45~11:00	장내 정리	
[Session 2] 종합 토론		
11:00~11:50	좌장	•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한국인공지능법학회)
	토론	•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 구태연 부의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킹센터)
		• 장준영 센터장(법무법인 세종 AI센터)
		• 김경만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11:50~12:00	질의응답	
12:00	폐회	

Contents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 인사말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
- 환영사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iii
- 축사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v
김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vii

발제 1

Deepseek이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 전쟁 2.0

하정우 센터장(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 1

발제 2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김용희 교수(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9

종합토론

〈좌장〉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33

구태언 부의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35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42

장준영 센터장(법무법인 세종 AI센터) 47

김경만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50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이훈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시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 하정우 센터장님과 경희대 김용희 교수님, 토론으로 함께해주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님, 고려대 계인국 교수님,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 장준영 센터장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국장님 그리고 좌장으로 수고해주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최경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과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인공지능 정책을 핵심 의제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AI행정명령이 혁신을 저해한다며 폐지를 단행하고, 700조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저비용·고성능 AI모델인 ‘딥시크’ 충격으로 세계 AI 정책지형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국민과 산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고 대응할 정책 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중심 첨단 기술산업 육성을 강조한데 이어, 당내 “AI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나타나는 글로벌 인공지능 정책의 지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방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고민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치열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인공지능 전선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 인프라, 서비스 투자는 물론,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 개발의 지혜가 모아질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시화된 인공지능 정책 변화와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 전략 공세에 맞서,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정책 전략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예산과 입법 등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 훈 기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훈기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좌장 역할을 수락해 주신 최경진 교수님과 발표를 맡아주신 하정우 센터장님, 김용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계인국 교수님, 구태언 부의장님, 장준영 센터장님, 오병일 대표님, 김경만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미·중의 세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 촉진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행정명령을 폐지했습니다. 이어 차세대 AI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5,000억 달러(약 73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발표한 AI 모델은 서비스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성능의 칩을 사용해 빅테크의 10분의 1 수준의 투자금으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 AI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시행되는 시점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지원보다 선부른 AI 규제로 인공지능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미래를 대비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인공지능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 성 호**

축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입니다.

국회 과방위 이훈기 의원님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우리 과방위 의원님들께서 인공지능 관련 토론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이자, 우리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국회가 나서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우리 과방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수많은 인공지능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에서도 국회 차원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덩시크 사태 이후로 더욱 강화된 미중 패권 경쟁은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역시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계와 산업계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부까지 한 데 모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달 말 예정된 과방위 공청회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훈기 의원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로 수고해주시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 하정우 센터장과 김용희 교수님, 좌장으로 수고해주시는 최경진 교수님과 토론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국회 과방위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2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민 희**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 현입니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발제자 분들과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훈기 의원님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혁신적이며 글로벌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AI 관련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 사회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AI 정책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국내에서 진행하고도 해외로 나가야 하는 현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미비 등은 AI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I 산업 진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쟁을 넘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회 과방위에서는 오는 19일, 여야가 함께 AI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네이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닌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AI 기업들은 인프라 구축과 R&D 자금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여야 의원들과 협력하여 AI 관련 추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I반도체, 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AI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깊이있는 논의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 현**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발제

1

Deepseek이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 전쟁 2.0

하정우 센터장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



Deepseek 이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전쟁 2.0

2025. 2

하정우, PhD: jungwoo.ha@navercorp.com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
과실연 공동대표,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한국공학한림원 컴퓨팅분과 정회원
<AI전쟁>, <2025 AI 대전환> 작가

NAVER Cloud

생성형 AI의 패러다임의 변화



NAVER Cloud

잘못 알려진 오해와 아마도(?) 진실

- **개발 비용 80억원? No:** 1회 학습비용일 뿐 그 동안 실패, 인건비 (연구자 1명 20억), 데이터구축비 제외
-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 No.** Knowledge AI 만렙 짙은 AI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만 가능 (DeepSeek-V3 보유, 한국에는 몇 개 기업 존재).
- **이제 고가의 GPU는 필요없다? No.** 제본의 역설. 비용이 줄어서 줄어든 비용이상으로 강화학습에 더 많은 고사양 GPU를 넣어서 RL의 규모 확장을 통해 더 똑똑한 Thinking AI로 만드는 경쟁 예상
- **메모리 사업은? 중요!** 사고하는 AI는 AI 에이전트로 로봇, 자동차, 가전 등 모든 기기에 탑재 & 확산. 고성능 HBM도 고효율 LPDDR 수요도 폭증 예상
- **개인정보 위험? Yes but..** DeepSeek이 제공하는 챗봇, 앱은 많은 개인정보고 중국 서버에 저장. 하지만 AI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다 쓰면 (MS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 리스크 완화
- **편향되어 있나? Yes.** 미국 빅테크 AI는 미국가치관 AI, DeepSeek는 중국 체제 대변 AI
-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질까? Yes!**

NAVER Cloud

미중의 AI 안전성 약화와 EU의 AI 레이스 참가 (300조 투자)



NAVER Cloud

미국 압박에 따른 EU 규제 완화


Tech

Commission withdraws AI liability directive after Vance attack on regulation

The Commission justified its removal by saying it could see "no foreseeable agreement" on the directive.

This article is exceptionally available for free! Want access to more exclusive content like this? [Request a trial](#)


Discover all the benefits of Euractiv Pro.



Tech

Commission to withdraw proposed ePrivacy Regulation

The Commission's updated draft work programme confirms the withdrawal of the ePrivacy Regulation proposal.



<https://www.euractiv.com/section/tech/news/commission-withdraws-ai-liability-directive-after-vance-attack-on-regulation/>
<https://www.euractiv.com/section/tech/news/commission-to-withdraw-proposed-eprivacy-regulation/>

NAVER Cloud

DeepSeek 사태의 의의 (자세한 내용은 QR)



- 미국 vs 중국 오픈소스 생태계 경쟁으로 확산 예상
- 오픈소스 AI 를 가져다 쓰는 것 만으로는 그 나라 가치관 AI 만드는 것은 불가능
- DeepSeek 가 o1이 밝히지 않은 디테일을 공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도 도전할 것
- 천문학적 투자가 아니어도 수조단위 투자면 Thinking AI 진입 가능: 우리도 정부+기업들 공동 투자로 도전 가능 (추경!!) - (e.x. 기업 5천장 + 정부 1만장 = 1.5만장 활용)
- 다행히 우리나라는 Knowledge AI 거의 만렙에 도달한 기업들 보유 (네이버, LG 등)
- 소프트웨어 기술 스타트업과 인재 부족? 이것도 충분한 GPU가 있어야 양성 됨: 매우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해야 기술자산도 축적됨 그러기에 GPU가 태부족 → 빠르고 스케일 큰 그리고 연결된 GPU 확보 필수
- Thinking AI 통한 AI에이전트 + 각 산업별 추론 CoT 데이터 확보 → 중소 중견 기업 경쟁력 강화
- 그냥 DeepSeek 가져다 쓰면 된다? 종속으로 가는 길. 프랑스, 독일 등의 중견국들에게 더 뒤쳐지게 될 것
- 국내 오픈소스 AI 생태계 강화 전략 필요 →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연계 전략

NAVER Cloud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AI 생태계 전략이 필요

도메인별 버티컬 어플리케이션 (제조, 교육, 금융, 공공), 앱서비스, 제품 (디바이스, 로봇, 등등)

도메인 및 산업별 컨설팅, 미들레이어 (에이전트 Ad-hoc 모듈), SI기업 (레거시 시스템 연동)

AI 에이전트

FMOps 및 배포시스템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LLM, MLLM, 추론강화 L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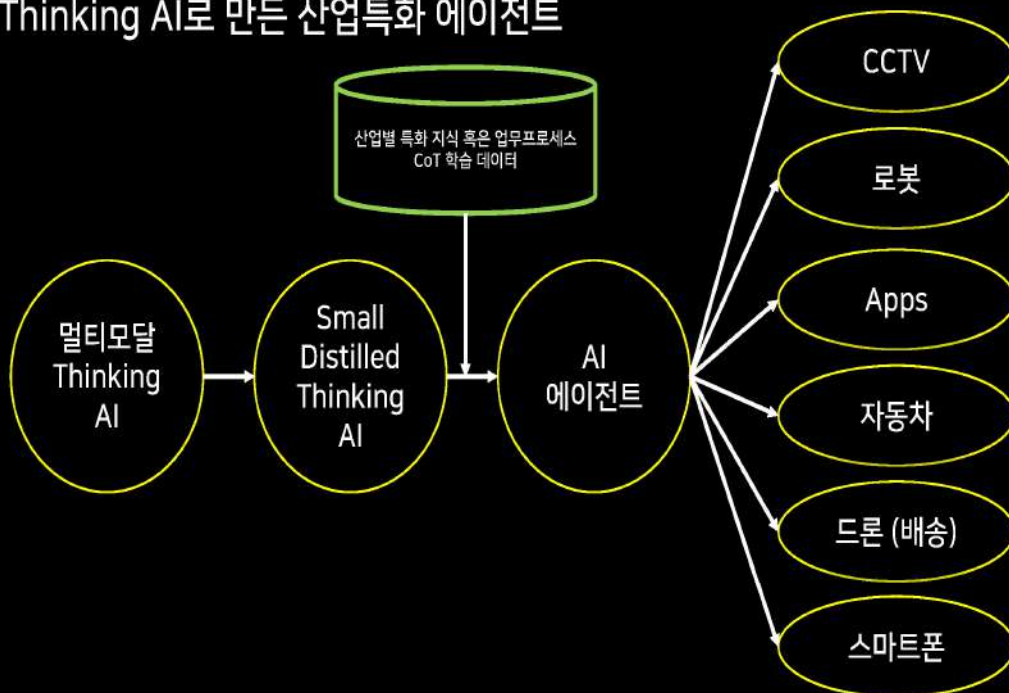
클라우드

AI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GPU, NPU,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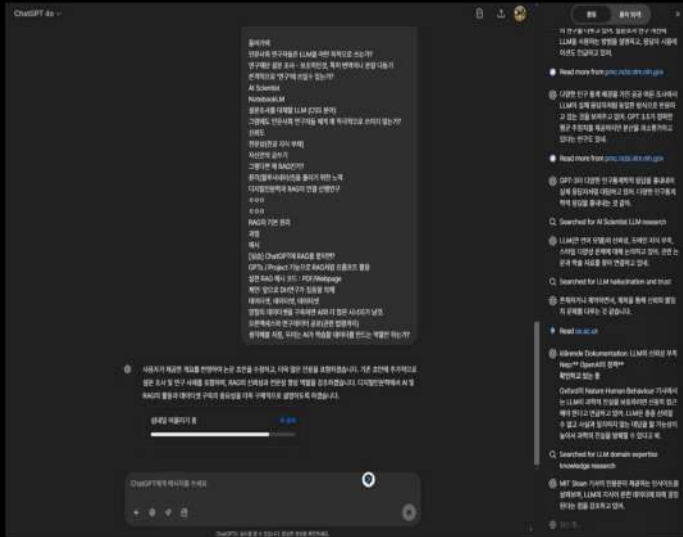
NAVER Cloud

Thinking AI로 만든 산업특화 에이전트



NAVER Cloud

Thinking AI 시대 사람들의 일자리? 업의 변화!



- AI 리터러시 강화
- Re-skilling, Up-skilling
- 시가 잘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더 잘 할 일
- 격차해소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 모든 직업에서 AI를 도구/팀원으로
- 책임감 있게 안전하게 활용

NAVER Cloud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우리도 해볼만 하다! AI 3대 기둥

AI G3로 가기위해 소버린 AI를 넘어 동남아+중동+남미를 품는 문화포용적 AI 리더로

국가 전체 AI 전략 수립 집행할 AI 거버넌스 고도화 (파편화 된 역할, 누가 국가 CAIO인가? 그럼 권한은 있나?)
(영국의 AI Opportunity Action Plan 참고)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 국가 AI 데이터센터 계획 더 빠르고 더 대규모 투자 (민-관)
(ex. 2025 3만, 2026 5만, 2027 10만)
- 민관 합해 조단위 투자면 충분히 경쟁 해볼 만
- 단기: GPU집중, 장기: NPU확대
- 충분한 에너지 공급망 (글로벌)

데이터

- 산업별 도메인 전문지식 CoT 데이터
- 아세안, 아랍, 중남미(스페인)언어를 아우르는 Non-Eng 데이터 디지털화 리딩
- 지재권 데이터 학습 활용 후 모델 오픈소스화 할 때 샌드박스

인재

- 양성을 넘어 **확보 정책** (유인, 유지에 방점)
- 다시 돌아올 매력이 있는 나라로
- 전략기술 인재 대기업 병역특례 인정 (ex. 해외유학 중)
- 30-40대 국가 AI 과학자 선발
- 학교와 기업의 벽을 허무는 5:5겸직

다양한 제도, 규제, 법적 안전장치 (전략기술에 한한 Negative 등) - 트럼프 정부의 규제완화 전략

NAVER Cloud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발제

2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

김용희 교수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 추구

AI 규제의 필요성과
정책적 접근 방식 탐구

김용희

인공지능법과 정책의 글로벌 현황 1.

1. 미국의 AI 정책 변화

- 트럼프 행정부 1기 (2017 ~ 2021)
- 바이든 행정부 (2021 ~ 2025)
- 트럼프 행정부 2기 (2025 ~)

미국 AI 정책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 1기 (2017~2021)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
13859호

주요내용

- AI R&D 투자 촉진
- AI 표준 개발 및 테스트 장애 제거
- AI 인재 양성
- AI 신뢰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 국제 협력 강화와 핵심 기술 보호

규제 접근방식

- 혁신 촉진 중심의 규제 최소화 정책(light-touch)
- 위험 기반 접근법 채택
→ 마련된 백악관 지침서(M-21-06)는 **"AI로 인한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 노력이 정해져야 한다"**
- 세계 최초 AI 규제원칙 수립

R&D 투자 확대

- 비국방 AI R&D 예산 2배 증액 목표
- 국가 AI 연구소 (National AI Research Institutes) 7곳 신설
- AI 인력 양성 및 교육 투자 확대

혁신 지원체계

- 연방 데이터/컴퓨팅 자원 개방
- NIST 중심 AI 기술표준 개발
- 민간 주도 혁신 지원

→ 과학·기술·경제적 AI 선도 지위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미국 AI 정책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 AI 정책 (2021-2025)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2022)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윤리적 AI개발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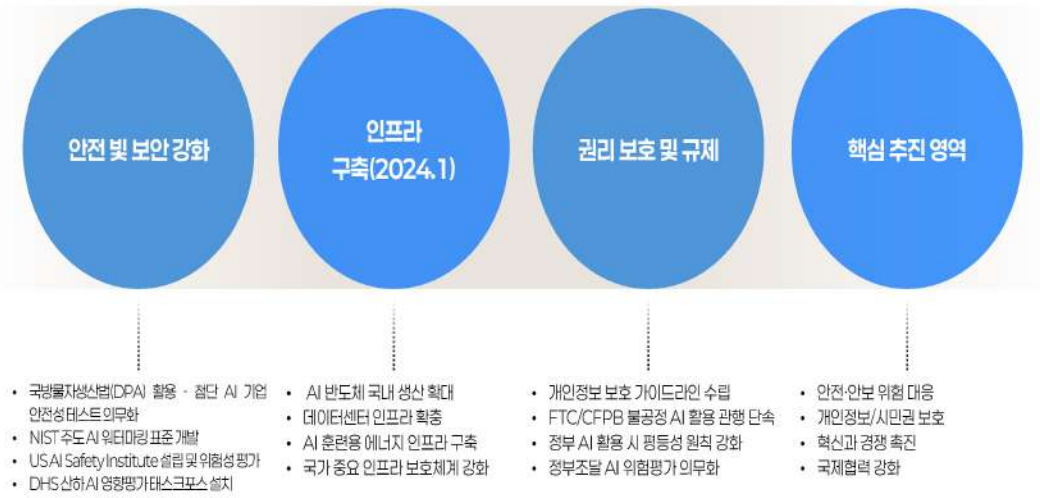
정책기준	AI 권리장전 5대 원칙
정책모토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AI	1.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AI시스템의 안정성과 효과 보장
핵심가치 규범과 윤리 중심 거버넌스	2. 알고리즘적 차별 방지 공정과 형평성 보장
적용범위 연방정부 및 민간 부문 가이드라인	3. 데이터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4. 시스템 투명성 설명 가능성과 의사결정 과정 공개
	5. 인간 개입 보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대안과 통제권 제공

미국 AI 정책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 AI 정책 (2021-2025)

행정명령 14110: AI 안전성 및 인프라 구축

연방 차원의 종합적 AI 위험 대응 및 기술 주권 강화(DH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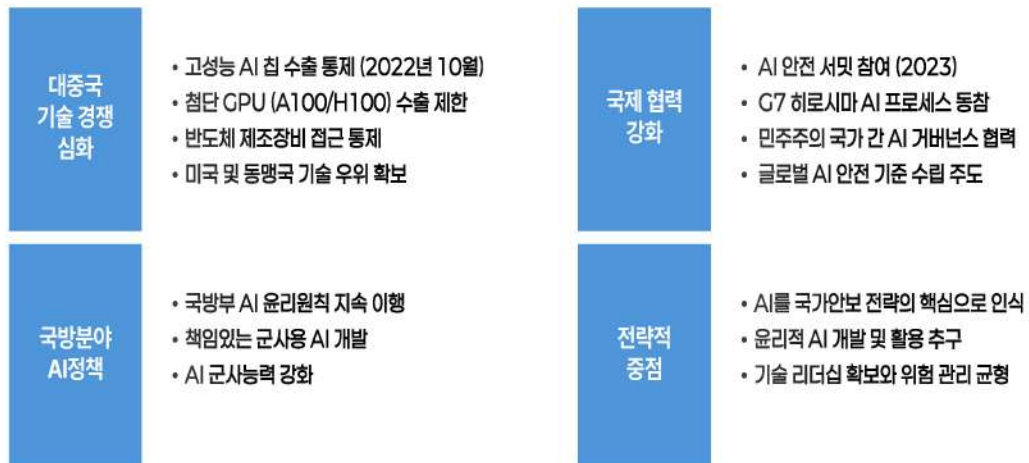


미국 AI 정책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 AI 정책 (2021-2025)

국가안보 및 AI 윤리 중심 정책: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윤리·안보 위험 완화의 균형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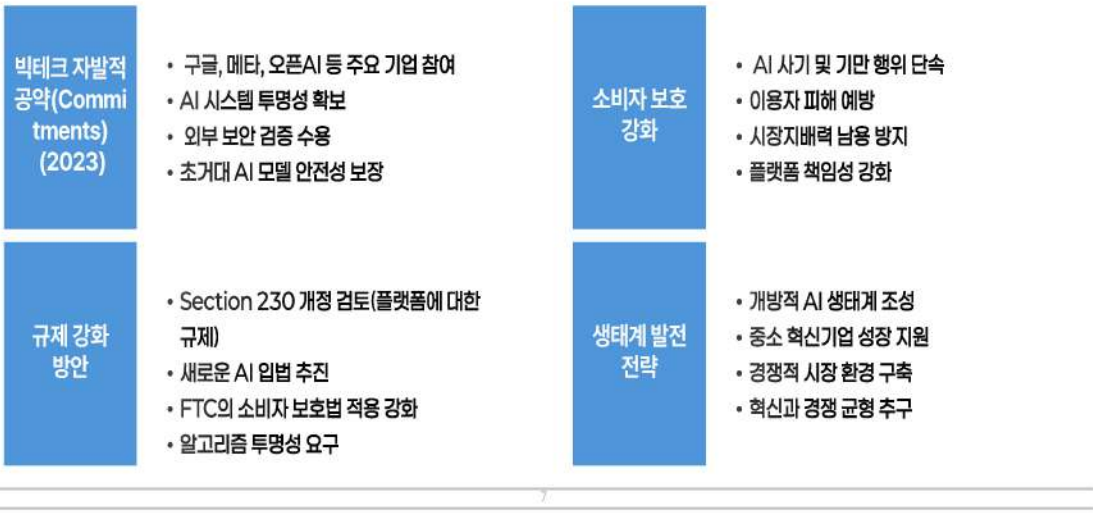


미국 AI 정책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 AI 정책 (2021-2025)

AI 빅테크 규제와 생태계 조성 정책:

거대 AI 모델 규제와 건전한 경쟁 환경 구축 → 빅테크 규제와 혁신 생태계 육성의 균형적 접근



미국 AI 정책의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 AI 정책 전망 (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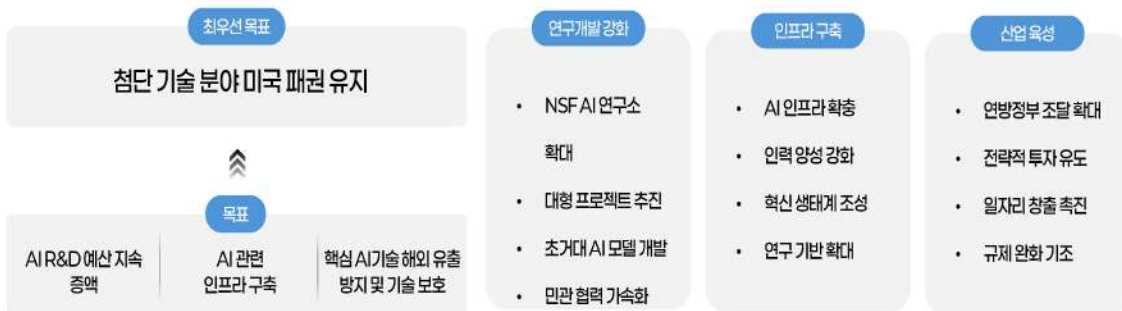
정부 규제에서 민간 자율로의 AI 정책 기조 전환



미국 AI 정책의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 AI 정책 전망 (2025 ~)

"미국의 AI 지배력(dominance) 확보" 전략:
AI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술 패권 수성



출처: The White House, (2025, January 23).

미국 AI 정책의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 AI 정책 전망 (2025 ~)

미국 우선주의 기반 강경 노선 전망:
미국 주도의 글로벌 AI 패권 확보 및 자국 이익 우선 정책 강화



출처: The White House, (2025, January 23).

미국 AI 정책의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 AI 정책 전망 (2025 ~)

미국 우선주의 기반 강경 노선 전망: 미국 주도의 글로벌 AI 패권 확보 및 자국 이익 우선 정책 강화

정책기조 전환	정부 역할 재정립	시장 영향
현재 : 규제 중심 정책	규제자 → 촉진자로 전환	기업 자율성 확대
향후 : 산업 주도 혁신	이념적 규제 배제, 최소 규제	빅테크 기업의 윤리 준법 경영 기조 변화
	민간 전문가 영입(AI & Crypto)	벤처 투자 관점 반영, 자유와 혁신 선도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적응 필요	자유시장과 안전장치 간 균형점 모색	기업 주도 AI 혁신 시대 개막

미국 AI 정책의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 AI 정책 전망 (2025 ~)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 동시 확보를 위한 균형적 접근 필요

<p>미국 AI 규제 환경 영향</p> <p>규제완화 전환 예상(트럼프 2기)</p> <p>글로벌 규제 본질화 심화 예상(유럽은 사전 규제)</p>	<p>한국의 과제와 기회</p> <p>미-중 AI 패권경쟁 / 기회와 도전이 병존</p> <p>EU-미국 중간노선 채택...</p>
<p>규제 패러다임 경쟁</p> <p>유럽은 신뢰성 중심의 엄격 규제, 미국은 혁신 중심의 유연규제</p> <p>이중 규제 환경 대응 필요</p>	<p>정책 대응 방향 고민</p> <p>이상: 자율-규제 균형 전략 추구 / 글로벌 시장의 접근성 확보</p> <p>국제 협력 대상 및 표준화 참여 결정과 강화</p>

인공지능법과 정책의 글로벌 현황 2.

1. EU: 법률 및 윤리적 규제 방향
2. 일본: AI정책 및 산업 육성 방향

EU의 AI 정책 흐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핵심 원칙

- 인간 중심의 AI
- 신뢰할 수 있는 AI
- 법적 확실성 제공
- 기본권 보장

위험 기반 (RISK-based) 규제

중인 불가 위험: 사회신용점수화, 실시간 안면인식 등 전면 금지

고위험

- 사전 인증, 평가 필수
- 투명성, 안전성, 인간 모니터링 요구

제한적 위험: 투명성 의무 부과

실행방안

2024년 AI ACT 발효
강력한 과징금 체계
AI 혁신 패키지 실행

주요과제

기업 규제 부담 완화
글로벌 규제 격차 해소
혁신-규제 균형 확보

일본의 AI 정책 전략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

AI 전략 비전

- Society 5.0 (초 스마트 사회) 구현
- AI as a Service 관점 도입

중점 활용 분야

의료

모빌리티

생산성

Agile Governance

기본 접근

- 유연한 규제 체계 운영
-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 비구속적 지침(Soft law) 중심 자율 규제

주요 가이드라인

1. AI 윤리원칙 구현 지침
2.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 1단계 개별 분야 데이터 활용 확대
- 2단계 분야 간 AI/데이터 일반적 활용
- 3단계 전 사회 AI 통합

산업 육성 전략

- 신학연 AI 연구개발 컨소시엄
- 대학-기업 연계 인재 양성
- 슈퍼컴퓨터 인프라 제공
-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지원

15

주요국의 AI 정책 비교

주요국 AI 정책 비교 및 시사점

혁신 촉진과 위험 관리의 조화를 통한 한국형 균형점 도출 필요

미국

- 자유로운 혁신
- 시장 주도 발전
- 불필요한 규제 자제

정부 역할 재정립

- 규제자 → 촉진자로 전환
- 이념적 규제 배제, **최소 규제**
- 민간 전문가 영입(AI & Crypto)

시장 영향

- 기업 자율성 확대
- 빅테크 기업의 윤리 준법 경영 기조 변화
- 벤처 투자 관점 반영, 자유와 혁신 선도

규제 강도 낮음

규제 강도 높음

규제 강도 중간

시사점

1. 규제 수준 최적화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 저하
미국 모델의 유연성 참고 필요

2. 신뢰기반 구축

기본권 보호 장치는 필요
EU모델의 윤리 체계는 참고 필요

16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AI 기본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식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재정배경

- 4차 산업혁명과 생성형 AI 등장
- 기존 법체계의 한계 인식
- 국가 차원 법체계 필요성 대두
- '20년 최초 발의, '24년 12월 본회의 통과

법안의 의의

- EU AI Act 이후 세계 2번째 포괄적 AI 입법
- AI 산업 진흥과 위험 규제 균형 추구
- AI 강국(AI G3) 도약 기반 마련

주요 목적

-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
- AI 이용자 신뢰 확보
- AI 위험 예방 및 안전한 확산

기대효과

-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 AI 산업 투자 촉진
- 체계적인 AI 발전 기반 구축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AI 기본법의 주요 조항

<p>용어 정의 및 범위</p> <p>AI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전자적 구현" AI사업자: 개발·제공 및 다인 AI 활용 주체 포함 국내외 불문 적용 (국방·치안 제외)</p>	<p>AI 윤리 원칙</p> <p>정부 윤리기준 수립·공표 자율적 윤리위원회 설치 지원 인간 존엄성·기본권 보호 AI 결정 설명 요구권 보장</p>	<p>해외 사업자 규제</p> <p>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법 준수 책임 이용자 대응 의무</p>
<p>정부 전략/거버넌스</p> <p>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AI안전연구소 운영 R&D 및 인재양성 지원</p>	<p>AI사업자 의무</p> <p>고영향 AI 자체 사전평가 AI 이용 사전 고지 생성형 AI 리벨링 위험관리체계 구축·보고</p>	<p>동맹국 협력</p> <p>과기정통부 조사권한 시정명령/중지명령 가능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율적 개선 유도 중점</p>

19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고영향 AI와 위험기반 접근법

위험기반 접근법: 일반 AI와 고영향 AI를 구분하여 차등적 규제 적용

비전

고영향 AI 정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

적용분야	주요 의무 사항	생성형 AI 특별 규제	위험 관리 체계
의료기기 진단 보조 AI 채용 심사 AI 대출 심사 AI 교육 평가 AI 공공서비스 의사결정 AI	사전 통지 의무 위험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영향평가 실시 AI 결정 설명 의무 안전성·신뢰성 확보	AI 사용 사전 공지 의무 AI 생성물 명확한 표시 딥페이크 등 위험 관리 예술작품 별도 기준 적용	대규모 연산 AI 모니터링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안전사고 대응 체계 정부 보고 의무

20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AI 기본법: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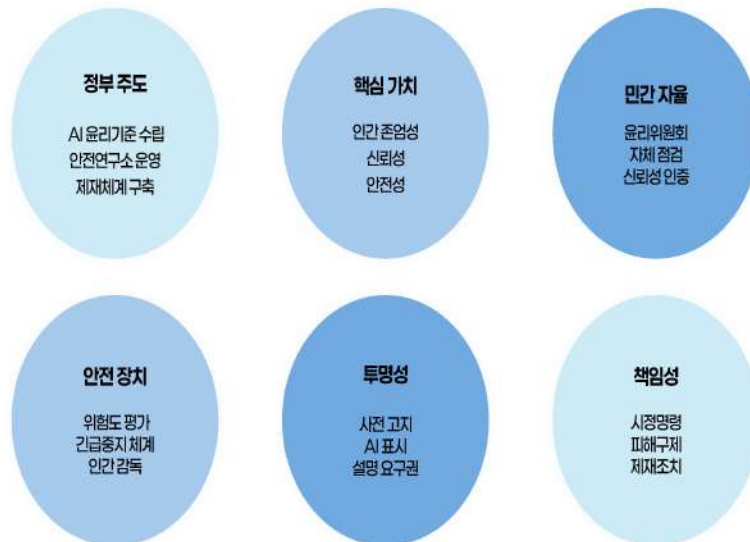
AI 기본법 :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AI 윤리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윤리는 자율적으로, 안전은 철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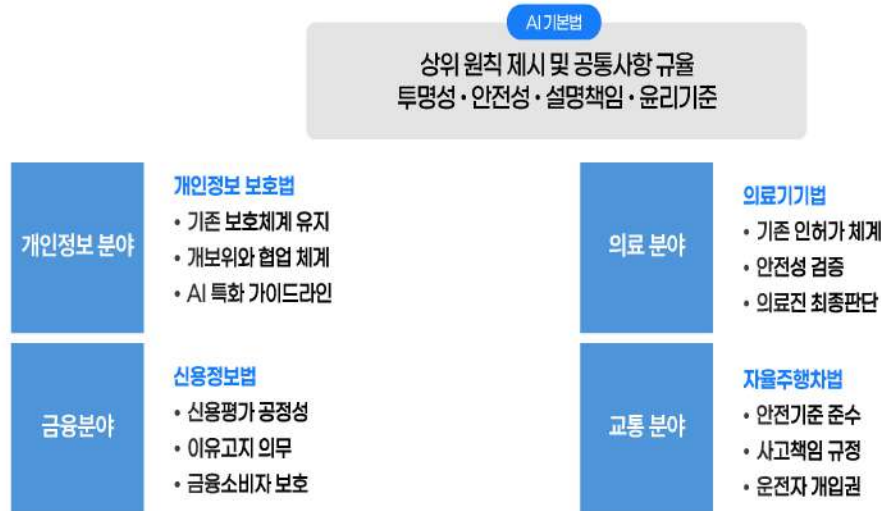
최종 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AI 기본법과 기존 법률의 관계도

통합적 접근: 분야별 특별법 우선 적용 + AI 기본법의 보완적 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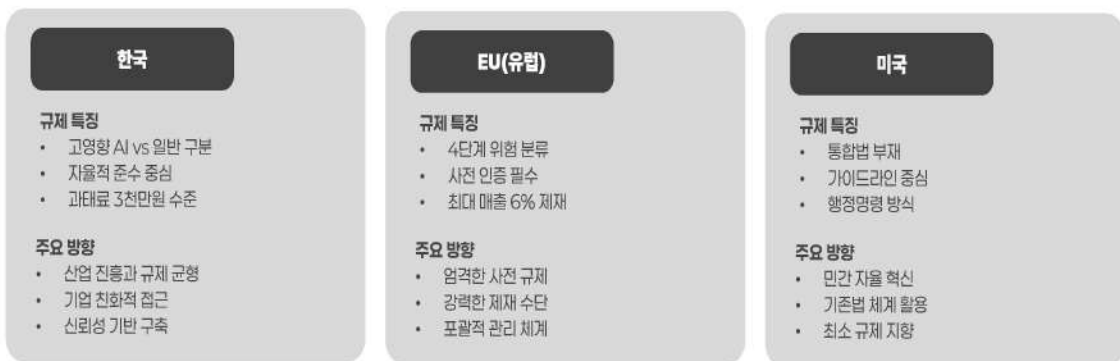


23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

AI 기본법의 국제 비교 및 향후 전망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24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기업 운영 부담 및 비용 증가

■ 사용자 고지 의무

- 고영향 AI 사용 고지
- 생성형 AI 표시
- 워터마크 시스템

■ 위험 관리 체계

- 리스크 평가
- 모니터링 시스템
- 인간 감독 체계

■ 안정성 확보

- 기술적 보호조치
- 품질 관리
- 검증 절차

■ 인력/조직 확충

- 전담 인력 채용
- 조직 구조 개편
- 교육 훈련

■ 제재 리스크

- 최대 3천만원 과태료
- 시정명령
- 형사처벌 가능

■ 문서화/보고

- 영향평가 기록
- 조치사항 문서화
- 정기 보고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기술혁신 저해 가능성 →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 찾기가 핵심 과제



27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기술혁신 저해 가능성 →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 찾기가 핵심 과제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

- AI 기본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 개념은 핵심 규제 대상이지만, 현재 그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
- 법률에는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어떤 수준의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볼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다시 말해, 시행령을 통해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제 범위가 크게 좌우
-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자사 AI가 고영향으로 분류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기도 모호한 상황**
- 산업계에서는 고영향 AI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호한 상태로 규제가 적용되면 기업들이 법 해석에 혼선을 빚거나 지나치게 위축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우려

시행령 및 후속 규정의 불확실성

- AI 기본법은 모법(母法)으로서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 규율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에 위임한 부분이 다수
- 이는 **항후 정부가 어떤 하위 규정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나, 초기 회의에서 구체 조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방향만 설명하여 업계가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지적
- 실제로 전문가들도 **“많은 부분이 항후 시행령 등에 달려 있다”**며, 법 통과 이후 디테일한 집행계획이 나와야 비로소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확실히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 개진
- 법만 통과됐을 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법적 공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그 사이 기업들은 규정을 잘못 해석해 위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행동하거나 법무 검토에 과도한 시간 필요

중복규제 및 관할 혼선:

- AI 기본법이 기존 분야별 규제와 중첩되는 문제도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역할
-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이미 2021년에 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 등에 AI 적용시 준수사항을 제시**
- AI 기본법이 대출 심사 등을 고영향 AI로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야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
- 보건 의료 등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전문 규제기관과 과기정통부 간 역할 조정이 필요
- 이러한 **중복 규제 영역에서는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지 불분명하여 기업이 혼란을 겪거나, 이중으로 규제 부담을 질 가능성**
-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단계에서 타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업계에 명확한 해석 지침을 제공 필요성
-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법 적용 범위를 해석하는 데 난해

28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 악화

- AI 기본법으로 인해 한국 AI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제기
- 자국 내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를 감내해야 하므로, 규제 부담이 적은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상품·서비스 개발 속도나 비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정부 차원의 권고와 가이드라인 위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법 준수 여부를 우선 고려하며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할 수 있음 → **규제가 산업의 모형을 만드는 정형성 문제 대두**
- 이러한 차이는 신제품 출시 속도나 AI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 저하 가능성
-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 간에 규제받는 역차별을 특히 우려하는데, 실제로 법 적용 초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규제 대상이 되어 부담을 지고, 해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 다분
-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의미

AI 패권 경쟁 속 규제의 영향

-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 수준은 각 국가 기업들의 기회와 위상 좌우
- EU의 사례에서 보듯 높은 규제는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하면 혁신 속도를 늦춰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
- 한국도 AI 기본법을 통해 선제적인 신뢰 확보를 노리고 있으나, 만약 세부 규제가 EU 수준으로 엄격해진다면 한국 AI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동력을 상실할 위험
- 특히, 중국은 비교적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지원을 통해 AI 기술력을 높이고 있고, 미국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는 분위기
-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강한 규제 집행에 치중하면 글로벌 투자 유치나 해외 협력에서도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 AI 인재와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촉진 가능성
- 요컨대 규제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저하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 시나리오이며, 기업들은 정부가 경쟁력 보호 관점도 함께 고려해주길 기대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등 해외 사업자 의무

- AI 기본법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 활동에 적용
- 특히 해외 AI 기업의 경우, 한국 내 법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현지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될 예정
 -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한국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을 두고, 기본법이 요구하는 안전성·투명성 조치를 이행의무 부여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글로벌 기업 현지화 의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을 뜻함
 - 예를 들어, 중소 규모의 해외 AI 스타트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법무법인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AI 시스템이 한국 기준의 고령화 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해외 기업은 아예 한국 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
 - 법은 한국 시장에 영향만 미치면 해외 개발 시라도 규제대상이 되므로,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선택을 할 위험 존재

국내 시장의 고립 및 소비자 영향

- 해외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은 국내 AI 산업 생태계의 고립 가능성도 일부 존재
- 글로벌 선도 AI 서비스(예: 최첨단 AI 챗봇이나 생성형 AI 플랫폼 등)가 한국 시장에서 이용 불가능해지면, 국내 기업과 소비자는 최신 기술 접근 기회가 줄어드는 불이익 우려
-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나 공정 경쟁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업체의 시장 회피로 이런 경쟁의 장이 축소될 가능성 존재
- 물론 해외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이 보호받는 효과도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혁신 흐름에서 한국 시장이 소외되어 전체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일부 대두

→ 해외 기업에 대한 합리적 적용 범위 설정과 국제 조화가 중요하며,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주시길 기대

■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기업-정부 간 협업상의 문제

규제 설계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 AI 기본법 입법 및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 조율 부족**이 지적
- 법 통과 이후 과기정통부가 꾸린 **하위법령 정비단 14명 중 산업계 인사는 1명에 불과**했고, **정착 시 모델·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불포함**
- 법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 탓에 **현장 기업의 목소리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정비단에 대형 로펌은 다 들어가 있지만 **기업은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로펌을 통해 빠르게 시행령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불만 제기
- **규제 설계 단계부터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기업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규제 이행 단계의 협업 이슈

- 법 시행 후에도 **기업과 감독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 문제점이 제기
- **기업이 자신의 AI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 문의하고 해석을 받아야 하는데 **해석이 일관성 없거나 지연**되면 기업 활동에 차질 우려
- 법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고나 민원 접수만으로 해당 기업에 사실조사(감독)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의적이거나 빈번한 민원 제기**로 인해 **과도한 조사**를 받을 우려 존재
- 이는 정부와 기업 간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고, 규제 당국과 기업이 **대립적 관계**로 변질 위험 존재
- 일부 업계는 해당 조항(제40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사소한 신고에도 정부 조사가 남발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

긴밀한 소통 및 조정 필요

- 궁극적으로 AI 규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청취해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이에 대해 정부도 “초안의 초안이라도 나오는 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행령 마련을 위해 **향후 여러 차례 업계 의견 청취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
- 향후 관건은 이러한 소통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는 주체인 동시에 AI 혁신을 이끌 파트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 감독자가 아니라 동반자적 자세로 협력해주길 기대**
- 기업-정부 간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AI 기본법의 취지인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현”**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아가야 할 길

AI 기본법 시행 대비 - 기업과 정부의 과제

기업의 준비 과제

컴플라이언스 대응

- 기업은 우선 **AI 기본법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 필요
- 내부 규정과 절차를 법에 맞게 정비하고,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AI 시스템이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평가**가 필요
- 예를 들어 AI 서비스 중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고영향 AI**로 식별하여 특별한 준칙을 마련
-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점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조치**(예: 출력물 표시 등)를 적용할 방안을 강구
- 이러한 대응을 위해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 준비 경영** 체계를 강화 필요

기술적 대응

- **기술적 조치**를 통해 AI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 필요
- 기업은 AI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을 강화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필요
- 특히 **생성형 AI**의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 출처 표시** 기능을 도입하고, 이미지·영상의 조작 및 악용을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
- 이와 함께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델 출시 전에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는하는 프로세스도 마련

33

AI 기본법 시행 대비 - 기업과 정부의 과제

기업의 준비 과제

비용 및 리스크 관리

- 규제 준수로 인한 **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경영 전략 수립이 요구
- AI 기본법 준수를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 확보, 시스템 개선 등의 **운영 비용**을 미리 산정하고 예산에 반영
-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AI 서비스 운영상의 위험 소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과태료 등 제재 위험**을 최소화 필요
- 이러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이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규제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정부 협력 및 정책 대응

- **정부와의 협력**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향후 마련될 시행령 및 세부 가이드라인에 기업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활발히 활용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이 규제에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 아울러 자사 서비스가 AI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지 조기에 자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준비 필요
- 정부가 운영 예정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AI 서비스를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하면서 규제 적용상의 애로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를 적극 검토
- 이밖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예: 시범사업, 컨설팅 지원)에 참여하여 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 필요

34

AI 기본법 시행 대비 - 기업과 정부의 과제

정부 정책의 과제 및 준비 사항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정비

-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
- **고영향 AI**의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제시할 필요 존재
- 예를 들어 어떤 AI 시스템을 **"고영향"**으로 볼 것인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기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규제 간 충돌이나 중복 회피 방안 마련 필요
- **세부적인 안의 마련이 어렵다면 그 안이 마련되거나 국내 AI 사업자의 경쟁력이 확보될때까지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필요**
- 명확한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원래 취지인 AI 안전성 제고와 혁신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법 통과 직후 이러한 후속조치를 2025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산업 경쟁력 보호

- AI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면서도 규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과제
- AI 기본법의 취지 자체가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의 균형에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시 과도한 규제로 산업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지나친 **규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이나 지원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
 -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시도에는 일정 기간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 실제로 정부도 AI 기본법이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민관 대규모 투자 촉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취지가 실현되려면 규제 집행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

AI 기본법 시행 대비 - 기업과 정부의 과제

정부 정책의 과제 및 준비 사항

국제 정합성 확보

-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준비 사항
- AI 기술과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전개되므로,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EU AI Act나 미국 등 주요국의 AI 정책과 조율될 필요
 -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이 크게 괴리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특히 EU는 최근 법안에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의무**(예: AI 생성 이미지임을 표시)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이 형성
 -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AI 윤리 기준을 내재화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활동에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유연성을 확보 가능

기업 지원 및 소통 강화

-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법 시행의 성공을 좌우
-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법을 손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필요 → AI 세액공제 등
- 규제 샌드박스나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규제 적용을 테스트하고 적용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할 필요 존재
- **이런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법 규제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간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
- **과거정통부도 "AI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처럼 정책 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감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종합토론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구태언 부의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장준영 센터장(법무법인 세종 AI센터)

김경만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토론 2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스타트업 관점의 AI 정책

구태언 부의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 토론 요지

- AI 산업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AI 정책 변화가 전 세계 AI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저작권 등 민간 분쟁에 정부의 미개입(연방수사권 미발동, 민사소송으로 해결),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반면 EU는 AI Act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주도의 AI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의 AI 규제 환경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성 확대, 규제 완화 및 명확화, 투자 유인책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함

2. 발제 1: Deepseek이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 전쟁 2.0 (하정우)

2.1 주요 발제내용

- DeepSeek의 등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오픈소스 AI 생태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I 모델이 단순히 오픈소스 기술을 가져와 활용하는 것만으로 국가별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독자적인 AI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도 이러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현재 AI 산업의 흐름은 Knowledge AI(단순 생성형 AI)에서 Thinking AI(추론 기반 AI)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학습과 AI 인프라가 필수적임.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급하며, 충분한 GPU, NPU,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야 함. 또한 산업별 AI 특화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제조·금융·교육·공공 등 도메인별 CoT(Chain of Thought) 데이터를 확보하여 AI의 실용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은 단순히 외국의 AI 모델을 가져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AI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GPU뿐만 아니라 NPU 확대 및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함. 또한 산업별 AI 데이터 구축 및 비영어권 언어 데이터(아세안, 아랍, 중남미 등) 확보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AI 인재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임.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재 양성을 넘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AI 연구자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및 전략기술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한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소버린 AI(자주적 AI)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동남아·중동·남미까지 포용하는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AI 오픈소스 생태계, 산업별 특화 AI 개발, 인재 양성 등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AI 3대 기둥(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인재)을 집중 육성해야 함.

2.2 발제 1 관련 토론 : 트럼프 2기 AI 정책과 글로벌 AI 패권 경쟁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대폭 철회하고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AI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AI 슈퍼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 원)를 투자할 계획.
- 이러한 정책 변화는 AI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함.
 - 기회: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이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음. 또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 도전: 미국 중심의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반면, EU는 AI Act를 통해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AI(예: 생체 인식, 금융 AI)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한국 기업들이 EU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2.3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주요 논점

2.3.1. AI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

- 한국은 미국의 AI 규제 완화 기조를 참고하여 AI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함
- 그러나 EU와 같이 강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AI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AI 규제를 혁신 촉진형(light-touch) 접근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3.2. 데이터 접근성과 AI 연구개발 지원

- AI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 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완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

- 미국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조정해야 함
- 공공 데이터를 보다 개방하고, AI 데이터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3.3.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와 지원

- 현재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며, 미국 및 중국의 기업들과 비교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짐.
- AI 스타트업 전용 투자 펀드 조성, AI 관련 세액 공제 확대, 정부 조달 우선 적용 등의 지원책이 필요함.
- AI 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함.

3. 발제 2: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 (김용희)

3.1. 주요발제내용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AI 안전성 규제(EO 14110)를 철회하고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글로벌 AI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춘 정책 조정이 필요함.
-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AI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고영향 AI**(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차등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AI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요구, 사전 위험평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원칙과 AI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도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AI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함. AI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규제 부담을 안게 되며, 이에 따라 AI 개발

- 비용이 증가하고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금융, 의료 등 기존 산업 규제와 AI 기본법이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 특히 AI 규제가 과도하면 국내 AI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미국과 중국은 비교적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규제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협력을 통한 규제 정합성이 중요함.
 - 정부는 AI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AI 기본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또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및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음.
 - AI 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임.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규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AI 서비스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함. 동시에 정부는 AI 규제의 취지를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기업이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결론적으로, AI 규제는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고, 한국 AI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함.

3.2. 발제 2 관련 토론 : AI 규제의 필요성과 균형적 접근

- AI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현재 한국의 규제 환경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AI 기본법이 **고영향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포함할 경우, 스타트업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3.2.1. AI 기본법의 고영향 AI 정의 모호성 해결 필요

- 현재 AI 기본법에서 ‘고영향 AI’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기업들이 자사의 AI 기술이 규제 대상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움.

- 미국과 같이 AI 규제를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으로 조정하여, 스타트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함.

3.2.2. AI 규제 샌드박스 확대 필요

- AI 기반 의료기기, 자율주행, 금융 AI 등 혁신적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AI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야 함.
- 예를 들어, AI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뷰노(VUNO)와 루닛(Lunit)은 국내 의료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 해외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AI 스타트업들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AI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해야 함.

3.3.3. 글로벌 AI 규제 조화 필요

- EU는 AI Act를 도입하여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를 지양해야 함.
-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면서도, 국내 AI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결론 및 정책 제안

-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 데이터 접근성 확대, 투자 지원,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4.1. 스타트업 관점에서 제안하는 정책 방향

- AI 데이터 접근성 확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AI 데이터 샌드박스 도입.
- AI 규제 완화 및 명확화: 고영향 AI 개념 정리 및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적용.
- 투자 유인책 확대: AI 스타트업 전용 펀드, 세액 공제 및 정부 조달 지원.
- AI 규제 샌드박스 확대: AI 의료기기, 금융 AI 등 혁신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 국제 규제 정합성 확보: 글로벌 규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 도입.

4.2. 결론

- 결국, 한국이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토론 3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오병일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1.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국 견제를 지속하며, 주요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약화할 것이 우려됨.
2.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빅테크들은 극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구글·아마존·메타 등은 소수인종 채용 등을 장려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잇달아 폐기·축소하고 있음.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베카 루이스는 가디언지 기고에서 실리콘밸리가 종종 진보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지만 사실 극우적인 이념과 뿌리 깊게 얽혀 있고 이는 '테크노파시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한편, 선거 전부터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X는 트럼프 지지와 해리스 비방, 선거 관련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를 쏟아내면서, 이러한 게시물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음. 이처럼 자사 이익을 위해 정책을 쉽게 변경하는 빅테크의 행태는 자율규제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줌.

3.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2025 국제 AI 안전 보고서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5)>는 위험 관리와 정책 형성에 대한 사회적 도전의 하나로 범용 AI의 강한 경쟁 압박으로 안전하고 윤리적인 모델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우려했음. 트럼프 정부의 자국 중심주의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들마저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됨.
4. 미국과 영국은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음.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에 관한 선언문'에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프랑스, 인도, 독일, 일본 등 58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서명했음. 미국은 "성장 지향적 인공지능 정책"이 안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함.
5. 대런 아세모글루는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발전이 단순히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권력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로 의존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과거 기술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았으며, 노동자 등의 투쟁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임. AI 기술 역시 소수의 기업과 권력층에 의해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AI 기술 혁신과 제도가 별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AI'를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6.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AI 규율을 위한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의 AI 규제가 국제규범과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도 중요함.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 OECD 차원에서도 AI와 관련한 여러 규범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유엔이나 OECD 등의 규범은 자율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개략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초의 법적 강제성이 있는 국제협약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AI 기본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의 가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11개국이 서명하였음. 한국이 국제적인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AI 규범 형성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7. 미국은 여전히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AI, 반도체, 전기차, 5G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음.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유럽연합, 인도, 남미 등 여러 블록별로 나뉘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를 저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8. 트럼프 정부 하에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 중국에 뒤쳐진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AI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경계함. 전 세계 AI 기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지나친 규제는) 이제 막 도약하려는 혁신적인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순위에 상관없이 성장 중심주의의 논리는 동일함. 그러나 아무런 사회적 개입이 없는 일방적 성장주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희생을 바탕으로 결국 소수 지배계급만의 이익을 옹호할 뿐임.
9. 발제자는 "혁신 촉진과 위험 관리의 조화를 통한 한국형 균형적 도출 필요"하다고 주장함. 그런데 세상에 혁신 자체를 반대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음. 규제를 '부담'으로 얘기하지만, 거꾸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와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또한 '균형'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인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일정하게 양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문제는 한국형 균형이든 세계적 균형이든 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임.

10. 관련하여 <2025 국제 AI 안전 보고서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이 정책 형성의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지나치게 선부른 조치가 비효과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뒤늦은 개입은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수집하고,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이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11. 시민사회, 또는 AI의 영향을 받는 자 입장에서 필요한 규제는 AI가 위협할 경우(즉, 안전이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답변을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고, AI 관련 법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함. 국회 과방위의 AI 공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산업계는 마치 이러한 위험이 미래의 일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또는 어떤 전문가는 시민사회가 AI의 존재론적 위협에 대해 주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지만, 시민사회는 ‘지금 이미 도입되었거나 조만간 도입될 수 있는’ AI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우려하는 것임. 예를 들어,
-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이미 광범하게 활용하고 있는 채용 AI의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만일 채용 AI에 편향성이 있다면, 구직자가 어떻게 이것을 인지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채용 AI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 평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없었음)
 - 경찰은 복합인지 기능으로 신원확인 및 추적, 범죄와 행동 예측을 목표로 하는 지능형 CCTV의 개발과 실증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이러한 CCTV가 시민감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평가와 상담을 위해 어떠한 AI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능의 적합성이나 공정성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왜 공개되지 않는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교과서 업체가 동의에 기반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의무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처리한다고 해도 정보주체의 옵트아웃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여 내 개인정보가 포

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 AI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전기 및 물)의 과도한 소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이 되지 않고 있음. 그렇다면, AI 사업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처럼 이미 수많은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변명에 그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12. 보다 합리적인 규제 정책의 수립과 규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 발제자는 “법 통과 이후 과기정통부가 꾸린 하위법령 정비단 14명 중 산업계 인사는 1명에 불과했고, 정작 AI모델·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불포함”했다고 지적하지만, 시민사회는 아예 배제되었음. 과기정통부의 보도자료를 보아도 시민사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하위법령 정비단 : 과기정통부(총괄), 국가AI위원회, 산업계(초거대AI추진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기관(NIA)으로 구성

- 과기정통부와 산업계·법조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조항별 초안을 마련하고, 국가AI위원회 및 학계 자문 병행

이미 편향된 초안이 만들어진 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들, 얼마나 의미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토론 4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장준영 센터장 (법무법인 세종 AI센터)

1.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국형 모범답안 마련을 집단지성이 요구

- AI에 대한 규제는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AI에 내포된 불확실한 리스크를 예방하면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
- 국가별로 방점을 두는 가치들에 기반한 다양한 규제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의 궁극적 목표는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
- 우리 역시 지난 8. 19. AI 연구거점 구축사업을 착수하면서 AI G3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는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법은 2026. 1. 22. 세계 최초로 본격 시행될 예정임
- AI 법 본격 시행 이전 우리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AI 고유의 리스크를 적절히 예방하면서 AI G3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 EU는 이미 시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AI Act를 세계 최초로 제정함으로써 제2의 GDPR과 같은 글로벌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자국의 이익 내지 목표에 따라 접근방향을 달리 하고 있음.

- 즉, 해외 주요국가는 기술에 대한 국가 통제와 AI를 통한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있는 과정. 각기 서로 다른 비전으로 기술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 EU는 시민의 권리(기본권)에 방점을 두어 위험기반 포괄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의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글로벌 “규제” 선도를 위한 것이 목표인 것으로 이해되나 최근 프랑스 등 AI 혁신기업을 보유한 회원국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 ▶ 미국의 경우 시장 중심의 자발적 준수에 기초한 규제로 평가되며, 글로벌 “기술” 선도를 위한 것이 목표인 것으로 이해되나, 최근 지난 정부의 AI 행정명령이 AI 혁신에 허들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기
- 결국 그간 경험하지 못한 AI 고유의 리스크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효 적절하면서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한국형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는 AI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술 혁신 모두 놓칠 수 없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안심구역 등 탄력적·자율적 규제 수단을 적극 고려할 필요

2. 그 간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유한 노력을 계승, 발전킴으로써 AI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

- AI는 데이터 처리 기술의 화룡점정으로서 DX 시대, 데이터 경제로의 본격적 전환에 있어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지만, 그 본질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또한 AI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은 AI 인프라(AI컴퓨팅설비 및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있는바, 양질의 데이터 확보·활용이야말로 AI 혁신에 필수적
- 우리나라는 IT 강국에 걸맞게 그간 DX에 대한 대비 및 이를 통한 글로벌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

즉 2013년 공공데이터 활성화 법률,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2021년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 왔음

- 2019. 12. 국가 AI 전략 발표를 필두로, 2020. AI 윤리기준, 같은 해 12월 AI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AI 규율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2023. 9. 디지털 권리 장전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 경쟁(그 결과 2023. 11., 2024. 5. AI summit 개최)
- 따라서, 그 간의 우리의 제도화 노력들은 이미 국내 AI 기업들에 대해 중요한 좌표가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의 규제체계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간의 노력이 발전적으로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